

전남 소득 역외유출 심화... “정주여건 개선 필요”

한은 ‘소득·소비 역외유출’ 현황

작년 19조 유출...전국 두번째 높아
생산·분배·지출 소득 성장 불균형
의료·교육 등 인프라 구축 나서야

전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GRDP(생산)와 GRI(소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타 지역으로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가 매우 크고,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의 유출 모두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분배·지출 소득 간 성장이 불균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임성은 과장과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이한솔 과장이 최근 발표한 ‘전남지역 소득 및 소비 역외유출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과 1인당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각각 19조원, 106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충남(25조 7000억원, 118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전남의 근로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충남(17조 5000억원), 경북(11조1000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이는 근무지의 취업인구가 거주지의 취업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전남지역 순비거주취업인구는 3만9000명으로 지역내 취업인구(93만 9000명)중에서 4.1%를 차지하는 등 전남지역 이외에서 출퇴근하는 취업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남의 기업소득 역외유출 규모 역시 12조4000억원으로 추정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본사(단독사업체 포함)와 사업체(공장, 영업소, 지점 등)의 소재지가 불일치한 데 주로 기인한다.

전남지역의 소득을 생산·분배·지출 삼면등가 측면에서 구분해 살펴 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각 계년간 성장 괴리도는 11.9로 전국 상위권(5위)에 위치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견조한 소비 증가가 지역내 생산 및 분배의 증가로 원활하게 선순환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전남의 역외지출금액은 11조 1000억원으로 2018년(3조8000억원)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역외지출의 업종별 비중은 온라인 쇼핑을 포함한 유통업

(54.4%)이 가장 높고 의료기관(12.8%), 요식업(9.0%), 여행(5.4%) 등의 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47.8%), 광주(20.7%), 경기(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남의 소득 및 소비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내 생산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국립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IT를 활용한 교육인프라 격차 해소, 복합쇼핑몰 유치 및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탄소국경세 도입, RE100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천혜의 섬과 바다, 풍부한 일조량 등 전남의 특성을 활

용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농수산업을 스마트화해 기후변화,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신산업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쾌적하고 한적한 자연을 선호하는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남의 자연·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역소득 성장 및 소비의 역내유입을 증대해야 한다”며 “기업소득이 역내 사업체에 설비 및 R&D 등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산업인프라가 전남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생산 및 소득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은리더스클럽 정기총회·강연회’ 성료

지역 중기 CEO 100여명 참석

광주은행은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CEO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은리더스클럽 2023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서는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주요 내용으로 2023년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이어 ‘즐겁게 사는 7가지 비결’을 주제로 개

만 이홍렬 강사가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광은리더스클럽’은 광주은행과 함께 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지난 2007년 9월에 창립해 현재 2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 등에 지역 복지시설 및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19개월 만 최저

호남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 동향 3% 초반 하락... 물가안정 기대감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 초반까지 하락해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1.3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3.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다 19개월 만에 3.2%로 떨어진 것이다.

광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월 4.7%, 5월 5.5%, 7월 6.6%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5.8%, 11월 5%로 5%선을 유지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1월 5.3%, 2월 5.1%, 3월 4.7%, 4월 3.9%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다 지난달 3%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도 111.7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는 추세

를 보였으며 역시 지난 2021년 10월 3.4%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남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월 4.0%, 5월 6.2%로 치솟다가 7월 6.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9월 6.3%, 12월 5.7%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 1월 5.5%, 2월 4.9%, 3월 4.1%, 4월 3.5%로 줄어 들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물가가 증가폭이 눈에 띄게 안정세를 찾은 것은 지난해 상반기 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 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광주지역 주택·수도·전기연료(7.8%)에서는 △전기료(25.7%) △도시가스(25.5%) 등이 크게 상승했으며 △의류신발(8.1%) △가정용품·가사서비스(5.8%) △기타상품서비스(6.5%) △오락·문화(4.6%) 등도 상승했다.

이외에 △음식·숙박(6.6%) △구내식

당비(10.3%) △생선회(5.5%) △피자(12.2%) △치킨(6.7%) △된장찌개백반(9.3%) △햄버거(10.3%) 등 외식물가도 크게 올랐다.

전남지역 역시 주택수도전기연료(7.0%)에서 △전기료(25.7%) △도시가스(24.7%)가 크게 올랐으며 △음식·숙박(5.5%) △해장국(10.5%) △피자(12.2%) △삼겹살(8.3%) △구내식당비(3.8%) △햄버거(10.3%) 등 외식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곽지혜 기자**

제 1070회 나눔로또

| 당첨번호 | 2등 보너스 번호 | |
|-----------------|------------------|-----------|
| 3 6 14 22 30 41 | 36 | |
| 등위 | 당첨방법 | 당첨금 |
| 1등 | 6개 숫자 일치 | 18억5911만원 |
| 2등 |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 6885만원 |
| 3등 | 5개 숫자 일치 | 147만원 |
| 4등 | 4개 숫자 일치 | 5만원 |
| 5등 | 3개 숫자 일치 | 5000원 |

금감원 Q&A

문 사례1> A씨는 불법대부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 내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대부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A씨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A씨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해 A씨와 그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렸다.

사례2> B씨는 불법대부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 받았고, 이를 통해 저장하고 있던 연락처 전부와 본인의 사진을 불법대부업체에 전송했다. 상환기일이 경과하자 불법대부업체는 음란물에 B씨의 사진을 합성해 B씨의 가족·지인·직장동료들에게 전송하고, SNS 등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B씨의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을 독촉했다. 이에 B씨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대인기피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

소하고 있다.

위 사례는 최근 불법대부업체들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수법이다. 채무자에게 연락처 일체와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해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알몸사진 등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이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답 우선 불법채권추심 수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대부업체들은 자금유통의 조건으로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위한 인증자료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자료라고 거짓된 설명을 하면서 채무자의 연락처 전부와 사진 파일, 그 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

지인·성착취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 주의하세요

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저장돼 있는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자.

첫째, 소액·금전이 필요할 때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정부는 저신용자에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출시했으니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을 통해 확인하자.

둘째, 대출상당시 주소록·사진파일·앱 설치 등을 요구 받으면 즉시 상담을 중단

해야 한다.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 받을 경우 불법채권추심이나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전혀 무관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대출상당 전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대출상담에 응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인파인(fine.fss.or.kr)이나 금융감독원 포털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하자.

넷째,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1332-3번)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대부업자(등록·미등록)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등에 성착취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